

5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김 석 준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매 월 첫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운영위원회가 이번 6월에는 연구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기되었다. 운영위원 중 상당수가 지난 5월 12일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 동지의 분신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영남노동연구소의 운영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실상과 과제 :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제주 4·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5.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연구회
7.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편에 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비롯한 제반 노동악법들이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1. 설립 취지와 추진 경과

1) 설립 취지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1994년 2

월 26일 창립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김영삼 정부는 개혁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소위 '문민정부'는 고동분담론에 뒤이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노·경총 임금 합의를 강제하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신보수주의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조 진영은 노총 탈퇴운동 등을 조직해 내고는 있었지만, 노동운동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출범은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잘 알다시피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전 세계의 노동운동이 침체국면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이 보여준 역동적인 발전상은 브라질,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세계 노동운동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비록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제3세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노동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영남지역 노동운동은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화학공업의 중심적인 사업장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 또한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남지역 노동자들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강한 결집력과 높은 노동자 의식, 그리고 왕성한 투쟁력으로 한국 노동운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민주노조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전국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책적 방침들을 모색하는 일, 나아가 다양화되고 입체화되는 권력과 자본측의 노동정책의 변화를 세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노조의 대응력을 높이는 일,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 및 '산별노조 건설' 작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천 방침들을 만들어 내는 일, 국내·외 정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큰 방향과 흐름을 제시하는 일 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노동정책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2) 추진 경과

영남노동운동연구소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노동현장에서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우선 현장 활동가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권력과 자본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매년 일상적으로 임금인상 투쟁, 단체협약 갱신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간부 역량만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나아가 대중적 동력마저도 점차 소실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전문연구자들과의 유기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8년 부산·경남지역의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사회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던 산업사회학이나 노동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노동현장의 구체적 현실에 보다 밀접히 결합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3년 상반기부터 가칭 '부산경남 산업노동연구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이 연구 모임에서는 산업사회학의 최신 이론들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하는 한편, 대우조선, 현대자동차 등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탐방 등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구 단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8월경 울산, 부산, 마산·창원, 거제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와 연구자 21명으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1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울산지역에서 권용목 현충련 고문 외 5인, 마산·창원 지역에서 이승필 마창노련 사무처장 외 3인, 부산지역에서 문영만 부양노련 의장 외 3인, 거제지역에서 최은석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외 2인, 그리고 학계에서 김석준(부산대), 김용기(경남대), 임영일(경남대), 정진상(경상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1993년 9월 추진위원회는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장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10월과 11월 두 달간에 걸쳐서 울산, 부산, 마산·창원, 거제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간담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진위원회는 12월 20일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가칭) 설립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남지역의 민주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설립 제안서를 토대로 다시 지역별 토론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이나 개별 활동가 및 연구자 등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노동계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에서 모두 8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아 1994년 1월 8~9일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발기인들은 연구소 창립에 대한 제반 준비를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추진위원회

는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창립에 필요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1994년 2월 26일 창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 연구소의 회원, 운영체계 및 재정

1) 회원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어느 연구소처럼 연구자 중심의 연구단체가 아니다. 연구소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영남지역 노동조합운동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운동에 영남지역 노동조합들이 힘있게 결합하여 전국 노동조합운동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정관 3조), 이 목적에 찬성하는 영남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노동운동가, 노동문제 연구자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정관 5조 1항). 실제로 연구소의 회원은 노동조합원 및 노동운동가인 현장위원과, 학계의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의사 등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인 연구위원, 그리고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진다. 1995년 6월 현재 고문 9명, 자문위원 14명, 연구위원 25명, 현장위원 72명을 합하여 연구소의 회원은 12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장위원의 비중과 역할이 두드러지게 크다는 점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처럼 현장위원들이 연구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다른 어떤 연구소보다도 노동 현장의 요구와 상황에 밀접히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구소에 참여하는 현장위원들이 대부분 소위 ‘강성의(?)’ 민주노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많은 억압과 통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소가 설립된 1994년의 경우에도 임투나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정영(신일 금속 노조위원장), 이갑용(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조길표(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문영만(부양노련 의장) 등의 현장위원이 구속되었으며, 서미애(메리놀병원 노조위원장) 등의 현장위원이 해고되었다. 올해에도 임투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명의 현장위원들이 수배를 당하고 있고 제3자 개입 등의 이유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구속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열악한 노동 현실 자체가 연구소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회원 이외에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받아 보고, 연구소의 소장 자료를 열람하거나 연구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료회원이 있다. 현재 자료회원은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약 200명에 달하고 있다.

2) 운영체계

연구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열리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연구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 현장위원, 상임 연구위원, 소장, 부소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운영위원회에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다. 1995년도 운영위원회에는 상임 현장위원으로 윤재건(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상철(현대자동차 노민추), 안기호(효성금속 노조위원장), 이승필(마창노련 의장), 이혜자(전 마창공투본 집행위원장), 차주원(화천기계 노조위원장), 백순환(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문영만(부양노련 의장, 구속중), 윤영규(병원노련 부산본부

장), 노재열(영남노조대표자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 연구위원으로는 강신준(동아대 교수), 최태룡(경상대 교수), 윤인섭(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을 관장하여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지는 소장과, 소장을 보좌하는 2명의 부소장을 두고 있다. 연구소 설립 이래 소장은 김석준(부산대 교수)이 맡고 있으며, 부소장은 임영일(경남대 교수)과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 공동대표)이 맡고 있다.

연구소의 일상 활동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에는 천창수(전 현해협 의장) 사무국장, 이혜자 정세분석실장, 노재열 조사연구실장 등 3명의 상근위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조사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분과위원회와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종별 분과위원회에는 조선, 자동차, 병원, 마창기계금속, 부양기계금속 등의 5개 분과가 있으며, 전문 분과위원회에는 산별노조 연구교육, 노동자 상태 및 의식 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 연구, 법제도 연구, 정치 및 이념 연구교육 등의 5개 분과가 있다.

연구소에 참여하는 연구위원 및 현장위원은 자신의 관심 영역이나 소속 업종에 따라 반드시 하나 이상의 분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분과의 운영은 분과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분과 활동을 통하여 현장위원과 연구위원들이 노동현장에서 제기되는 당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경우 임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현장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전문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산별노조 연구교육 분과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높은 참여와 책임의식 아래 공동연구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성과들을 기관지나 정책자료총서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3)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출연금,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연구소의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회원의 회비이다. 회원의 회비는 크게 노동조합이 가입한 경우와 개인 회원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결의를 거쳐 조합 차원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월 3만 원에서부터 차등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규모가 커서 회비를 많이 내는 노동조합은 그만큼 많은 수의 현장위원을 연구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위원이나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월 3만 원의 회비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자료회원은 월 1만 원의 자료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회원 및 자료회원의 회비 수입이 연구소 정상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관리나 회비 납부를 전담할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여 회비 납부를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회비 수입 이외에 노동조합에서 의뢰하는 조사나 연구사업을 통한 용역 수입이 재정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회원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출자도 재정난 타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여하튼 재정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연구소의 활동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냐하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들로서, 재정적 어려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는 데에는 이미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소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커지면 -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나아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게 되면 - 그만큼 연구소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구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3. 활동 내용과 성과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가들이 연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는 속에서, 연구소는 ①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해명하는 정책 연구, ② 자본과 권력의 신경영전략, 신노동정책 등에 대한 노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사 연구, ③ 노동운동의 당면 현안과 관련한 정기·비정기적 정책토론회의 조직화, ④ 실천 활동적 요구와 전문화 교육의 요구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 ⑤ 정세 및 산업, 노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분석, ⑥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한 상담 등을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은 매달 발행하는 기관지인 『연대와 실천』(1995년 5월말 현재 통권 12호 발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료집』(3권 발행)과 『정책자료총서』(3권 발행)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연구소가 가장 주력한

활동의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조직 건설의 경로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는 작업이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최대 과제는 기업별 노조체계를 산업별 노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방법을 둘러싸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에서도 적지 않은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소는 산별노조 건설, 더 구체적으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작업들을 영남지역의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는 『독일금속노조의 이해』(1994), 『산별노조와 산별노조 건설운동』(1995) 등의 정책자료총서를 간행하였으며, 7월경에는 『산별노조 백문백답』(가칭)을 출판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계급적 각성이 진전되면 될수록 생산 현장에서 자본의 노동통제 역시 다양화되고 세련되기 마련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에 넘겨줬던 생산 현장에서의 해계모니를 다시 장악하려는 자본의 노력은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중에 대한 조직적 장악력을 상실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연구소는 이러한 '신경영전략'의 공격적 성격에 주목하여 창립과 동시에 울산, 마산·창원 등지에서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내부 정책토론회의 성과를 모아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4.5)이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소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용역의

퇴한 '생활안정과 창의적 참여노동을 위한 인사·임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1994.6~1995.2)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우조선 기능직 사원에 대한 '월급제' 실시를 앞두고 노동조합측의 임금체계 및 인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사업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대우조선과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조선산업 분야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자본측의 '신경영전략'과 직무직능급제 도입 공세 앞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다른 노동조합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와 관련한 연구소의 정책토론회는 공개 정책토론회와 내부 정책토론회로 나누어진다. 노동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정책토론회는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1994년 상반기, 3회), '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조합의 대응'(1994년 하반기, 2회), '산별노조 건설의 전망과 과제'(1995년 상반기, 5회) 등을 주제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었다. 한편, 연구소 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회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 대응', '금속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방침', '95년 공동입투에 대한 기획' 등의 주제로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연구소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도 실시해 왔다. 교육 내용으로 주로 다루어진 것은 '노조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연대투쟁과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대응' 등이었다. 한편, 1994년 겨울에는 입투 준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통계분석 방법'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때 사용된 교재는 『노동조합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통계분석방법』(1995)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총서로 발간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연구소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작업을 대행하거나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정세 및 산업, 노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소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영남지역의 '노동정책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출범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1년 반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영남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올해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연구소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장위원들의 연구소 활동에의 결합도를 높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위원들의 연구소 활동에의 결합도가 기대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에서 중심적인 활동가인 현장위원들에게 부과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노동정책 연구센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위원들의 참여를 늘려가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의 충원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얼마 안 되는 연구위원들의 힘으로 그나마 지

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요구를 감당해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구소가 '노동정책 연구센터'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전문 연구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연구소 활동에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확충되면 전문 영역별로 특화된 분야를 전담케 함으로써 연구소의 전문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소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헌신을 밀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연구소 활동의 기반이 되는 민주노조운동이 성장 발전하여 그 정치경제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진 자'를 위한 '싱크 탱크' 못지 않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싱크 탱크'도 아무런 제재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해 내고, 연구소가 예컨대 금속산별노조의 영남지역 정책연구센터로 자리잡게 된다면, 지금 연구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확인하듯이, 이러한 전망이 단순히 먼 미래의 장미빛 희망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은 단합된 힘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겨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울타리를 벗어나 함께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한다고 해서 구속되고 수배

당하도록 하는 노동악법의 철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단식 농성중이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마저 제한하고 억압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선진사회로의 이행은 한갓 공염불이거나 허구에 불과하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일차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각성과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일이 그들만의 몫은 아니다. 역사의 진보를 고민하는 지식인들이 그들

의 노력에 동참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가 그러한 ‘연대와 실천’의 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석준/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등이 있고, “경제변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급적 대응 : 198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경제구조와 노동운동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0-7942, 783-3891,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교수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